# 한약 규격품 유통제도 평가

## 복지부 대상품목 확대 위한 사전조사 착수
## 무리한 대상품목 확대는 제도 부실화 초래

◇복지부는 최근 한약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규격품 유통실태를 조사했다.

복지부는 현재 3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약재 규격화 제도를 확대해 연내에는 1백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부터 27일 까지 20일간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의 규격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 그리고 한약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규격화 실시의 전반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는 자가점검표에서는 △규격화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성의 공감 여부 △실천의지 전망 등과 확대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작업에 대해 『규격화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과 규격화 대상품목의 확대 범위, 시기 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6종의 규격품목의 유통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규격화 품목 확대 만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규격화제도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36종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을 먼저 자리잡도록 노력한 이후에 규격품 유통의 추세에 따라 품목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36종의 규격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도 부족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마당에 대상 품목만을 마구 확대할 경우 세척·절단 등의 가공이 부실해질 우려까지 있어 오히려 규격품 유통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약재 잔류농약·중금속 연구
### 안전본부, 98년까지 종합대책 계획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한약재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식, 약본부는 현재 1백76건의 한약재를 검사하고 있으나 아플라톡신 등 유해물질을 내년부터 98년 까지 조사 연구사업으로 선정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약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착수되며 대책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수집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 약본부는 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순수분리제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 약학대학이나 한의과대학 교수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종합작성함과 동시에 내년도 실시되는 한약표준물질제조 연구사업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하고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 지방청서 한약재 허가 관리
### 복지부 모두 「신고」로 일원화

모든 한약재의 허가관리가 지방청으로 이관, 일원화된다。 또 허가 대신 모두 신고로 대체된다。 복지부는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한약재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빠르면 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만 지방청에서 신고로 관리를 하고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경우는 복지부의 허가로 관리를 해오는 등 이원화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생약규격집을 공정서의 범위에 포함시켜 모든 한약재를 신고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기존 약전수재 1백30종을 비롯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3백84종 등 5백14종이 됐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공정서에 수록된 경우는 모두 신고제로 전환했고 자료제출 의약품이나 신약의 경우만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 강원 한계논·휴경논 대체작목
### 강활·치코리·당귀등 소득 높아

강원지역에서 벼의 안전재배가 어려운 한계논이나 휴경논에 대체작목을 재배할경우 특용작물인 강활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농촌진흥원이 94~95년 2년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계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 콩·옥수수·메밀·당귀·강활·치코리 등을 대체작물로 심을 경우 10a(3백평)당 강활의 수량은 1백74kg, 소득은 85만4천원으로 한계논에 〈진부 올벼〉를 심을 때의 39만3천원 보다 2.2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농진원은 또 치코리는 〈진부 올벼〉에 비해 1.8배, 당귀는 1.6배로 특용작물이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을 나타냈고 밭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선택했을 때도 〈양절메밀〉 2기작이 7%, 〈찰옥 1호〉는 4%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지만 〈양절메밀〉 봄 파종재배는 수확기가 장마철과 겹쳐 대면적재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내방

△배영두 전사무국장 △박종연 이사 △신현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우대기 강원 태백시 공판장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정영석 충남 금산군 공판장장 △조병섭 충남 청양군 사무소장 △정일영 전남 구례군 사무소장 △류복구 경북 영주시 사무소장 △김정만 경남 고성군 소장。

## 칼 럼

# 전시회와 '생약 살리기'

이 종 용 회장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최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가 올해로 벌써 세돌을 맞는다. 농가에서 정성들여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약재를 비롯 국내 자생하는 희귀약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 수록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성원은 국산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러기에 더욱 고품질 생약재의 생산과 개발은 생약업계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산한약재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토불이 인식은 진일보한데 비해 생약재배농가의 어려운 현실은 아직 그대로라는 점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 수출해 오던 복령, 백출, 지황 창출 등이 지금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재배품목과 채취량는 갈수록 감소하고 그와 반비례해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종자 종근도 보전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보더라도 농민입장에서 보면 불공평 하기 짝이 없다. 29종을 제외한 모든 약재가 완전개방 돼 있는 상황에서 29개 수급조절품목 마저도 국내 약재값이 오르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언제든지 수입해 올 수 있는 반면 값이 폭락할 경우엔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의 어떠한 수매대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농민만 희생양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생약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생약농사 자체가 운 좋으면 돈 벌고 운 나쁘면 망하는 일종의 투기사업 처럼 인식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약농가에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양질의 약재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생약협회가 주관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생산농가를 독려하고 국산약재의 판로확보를 위한 생약인 스스로의 자구책인 셈이다. 그러나 생약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일관성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우리 생약살리기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으며 전시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에 그치고 말 뿐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생약살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정부 또는 정부 위탁기관에서 국내생산 생약재에 대한 하한가 수매제를 제도화 해야 한다. 또 주산단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약용작물의 계획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고품질 한약재 생산에 대한 생약업계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품질약재 생산을 위해 중금속과 농약에 대한 기준치의 설정 고시도 시급한 과제다. 재배할 당시부터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 검사에서부터 유기질 비료의 사용, 관수, 세척, 건조, 보존에 이르기 까지의 구체적 요령의 정립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업계의 우리생약살리기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도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생약인들의 한마당 큰 잔치로 자리할 수 있지 않으까.